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8
----------	------

제출연월일 : 2018. 10. 5.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1)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규정 삭제(안 제34조, 안 제37조, 안 제63조, 안 제67조)
-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조정 및 관련 규정 삭제(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1조)

나.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37조, 안 제39조)

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6항)
-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39조제1항)
 - 가)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나)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 3) 보상금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규정 삭제(안 제64조제2항)

라.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근거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3조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마. 「사도법」 제4조제3항
- 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2018. 8. 6. ~ 2018. 8. 28.(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9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를 “공유재산의”로 한다.

제3조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중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달하는”을 “미치지 못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대장가액”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절감하여야”를 “줄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1조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와”를 “경우와”로, “때에는 규칙이”를 “경우에는 규칙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때”를 “받는 경우”로, “초래하거”를 “주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기부 채납된”을 “기부채납된”으로,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를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부터”를 “제1항부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22조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23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를 “사용하지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로,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로, “호와”를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공단지 내”를 “농공단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전단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가목 부터”를 각각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전단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부터”를 각각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부터”를 각각 “가목부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60일까지”를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부계약일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을 “재개발사업구역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인가”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3항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각각 “구청장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5조제2항 중 “부적당”을 “부적합”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48조 중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는 때”를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를 “시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을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58조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제목 “(인계 인수 등)”을 “(인계·인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60조 중 “망실 또는”을 “잃어버렸거나”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에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분할납부 신청서”를 “분할납부신청서”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 중 “재산관리관”을 “구청장”으로, “때”를 “경우”로,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재산관리관”을 “구청장”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u>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공유재산의</u> ----- ----- -----.
제3조(<u>공유재산심의회 구성</u>) ① ~ ③ (생략) 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제3조(<u>공유재산심의회 구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이하 “ <u>령</u> ”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제3호의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u>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 」(이하 “ <u>령</u> ”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2. 울산광역시 <u>중구의회</u> (이하 “ <u>의회</u>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 <u>중구의회</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	<삭 제>

현행	개정안
<p>5. (생략)</p> <p>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⑤ ----- -----, ----- ----- ----- 경우----- -----.</p> <p>⑥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 ----- ----- ----- -----.</p> <p>⑦ ----- ----- ----- 경우----- -----.</p> <p>⑧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u>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전을 의결할 수 있다.</u></p> <p>⑤ <u>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u></p>	<p>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긴급한</u> ----- ----- -----.</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u>심의회의</u>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u></p> <p>2. ~ 5.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및 처분에 <u>다른</u> 용도 폐지</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u>미달하는</u> 토지의 취득·처분</p> <p>3. <u>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u> 재산 취득·처분</p> <p>4. 다음 <u>각목</u>의 재산에 대한 용도</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u>별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u>-----.</p> <p><삭 제></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 1. ----- ----- <u>따른</u> ----- -----</p> <p>2.----- ----- <u>미치지 못하는</u> -----</p> <p>3. <u>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u>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p> <p>4. --- <u>각 목</u>-----</p>

현행	개정안
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u>대장가액</u>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 ----- ----- ----- ----- <u>기준가격</u> ----- -----
나. 삭제	
다.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u>대장가액</u>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 ----- <u>기준가격</u> -----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 -- <u>실시</u> -----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 -- <u>호의</u>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u>각호</u> 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	③ ----- ----- <u>각 호</u> ----- ----- <u>기록</u> -----

현행	개정안
<p><u>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u></p> <p>1. (생략)</p> <p>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u>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u>의 재산</p> <p>3. ~ 5. (생략)</p> <p><u>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u></p> <p>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u>가능한 한</u>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u>절감하여야</u> 한다.</p> <p>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u>때</u>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재개발사업구역 내</u>-----</p> <p>3. ~ 5.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8조(재산의 집단화) ----- ----- ----- ----- <u>가능하면</u> ----- --- <u>줄여야</u> -----.</p> <p>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 <u>경우</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② <u>구청장은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p> <p>① <u><삭 제></u></p> <p><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p> <p>-----</p> <p>-----</p> <p>-----</p> <p>----- <u>경우</u>-----</p> <p>-----</p>

현행	개정안
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u>때와</u> 이후 변동이 있을 <u>때에는 규칙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u>경우와</u> -- ----- <u>경우에는 규칙에서</u> -- -----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 <u>사용할</u> ----- ----- ----- -----.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u>초래하거나</u>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u>받는 경우</u> ----- ----- <u>주거</u> ----- -----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u>한한다</u>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 ----- <u>한정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기간) <u>기부 채납된</u>	제16조(무상사용 기간) <u>기부채납된</u> -

현행	개정안
<p>재산의 무상사용 <u>기간</u>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이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략)</p> <p>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u>초래할</u>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 <u>기간</u> -----</p> <p>-----</p> <p>-----.</p> <p>-----</p> <p>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p> <p>-----</p> <p>----- <u>경우</u>-----</p> <p>-----</p> <p>-----</p> <p>-----.</p> <p>② ----- <u>각 호</u>-----</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 <u>줄</u> -----</p> <p>제19조(사용·수익허가) -----</p> <p>----- <u>경우</u>-----</p> <p>-----.</p>

현행	개정안
<p>1. ~ 6. (생략)</p> <p><u>7. 허가조건</u></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u>경우</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경우</u>-----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제1항부터 ----- ----- ----- 구청장이 -----.
제22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생략)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고권 배제) ----- ----- 경우----- ----- -----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 -----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	<삭 제>

현행	개정안
<p><u>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u></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u>제25조</u>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u>외국인 투자기업 등</u>"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u>호</u>와 같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가</u>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u>농공단지내</u>의 공유재산</p> <p>3. 「<u>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u></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6호-----</p> <p>-----</p> <p>----- "<u>외국인 투자기업 등</u>" 이라 한다-----</p> <p>----- <u>호의 어느 하나와</u> --.</p> <p>1.-----</p> <p>----- <u>구청장이</u> -----</p> <p>-----</p> <p>2.-----</p> <p>-----</p> <p>----- <u>농공단지 내</u>-----</p> <p>3.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u></p>

현행	개정안
<p>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4. (생략)</p> <p>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p> <p>6. (생략)</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p>1. 2.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에 관한 법률」 제2조-----</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5. 구청장이 -----</p> <p>-----</p> <p>-----</p> <p>6. (현행과 같음)</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 <p>-----.</p> <p>다만, 제2호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3. (생략)</p> <p>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u>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 -----</p> <p>3. (현행과 같음)</p> <p>4. <u>구청장이</u> ----- ----- ----- ----- -----</p> <p>5. ----- ----- ----- ----- ----- <u>경우</u></p> <p>6. ----- ----- ----- ----- <u>경우</u></p>

현행	개정안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우-----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 구분에 따른 금액을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경우----- -----. ----- ----- ----- -----.

현행	개정안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u>외국인투자기업</u> 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 <u>외국인투자기업 등</u>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전체생산량</u> 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u>전체 생산량</u> ----- ----- ----- -----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바. <u>가목</u>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u>가목</u> 부터 ----- ----- ----- ----- -----
사. <u>가목</u> 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	사. <u>가목</u> 부터 ----- ----- ----- -----

현행	개정안
<p>설하는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나. (생략)</p> <p>다. <u>전체생산량</u>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생략)</p> <p>마. <u>가목</u>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u>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 라. (생략)</p>	<p>-----</p> <p>2.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전체 생산량</u>----- ----- ----- ----- -----</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u>가목부터</u> ----- ----- ----- -----</p> <p>바. <u>가목부터</u> ----- ----- ----- ----- -----</p> <p>3.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마. <u>가목</u>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u> 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6조제1호</u> 부터 <u>제3호</u>까지 <u>지</u> <u>규정</u>에 해당하는 경우</p>	<p>마. <u>가목</u>부터 ----- ----- ----- -----</p> <p>바. <u>가목</u>부터 ----- ----- ----- ----- -----</p> <p>사. <u>제26조제1호</u>부터 <u>제3호</u>까지 -----</p>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u>기준</u>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 ----- <u>어느 하나</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에 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② ----- ----- <u>경우</u> <u>에는</u> -----

현행	개정안
<p>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제3항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u>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60일까지</u>로 하며, 1년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p>	<p>----- -----.</p> <p>③ ----- ----- ----- <u>경우</u>----- --. <u>다만</u>----- ----- ----- ----- -----.</p> <p>④ ----- 「<u>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u>」----- ----- -----.</p> <p>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 ----- ----- ----- <u>60일 이내</u>----- ----- ----- -----.</p> <p>② -----</p>

현행	개정안
<p>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이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③ <u>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u>2. 대부계약 년월일</u></p>	<p>-----</p> <p>-----, <u><후단 삭제></u></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u></p> <p>-----</p> <p>----- <u>경우</u>-----</p> <p>-----</p> <p>-----</p> <p>-----.</p> <p>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2. 대부계약일</u></p>

현행	개정안
<p>3. ~ 10. (생략)</p> <p>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p>	<p>3. ~ 10. (현행과 같음)</p> <p>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2. ----- ----- 경우</p> <p>3.----- ----- 재개발사업구역 안-----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 사업</p>

현행	개정안
<p><u>사업시행인가</u>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u><신 설></u></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p>	<p><u>시행인가</u> ----- ----- <u>경우</u></p> <p>4.----- ----- ----- <u>경우</u></p> <p>5.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u><삭 제></u></p> <p>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p>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p> <p>-----</p> <p>----- 경우</p> <p><삭 제></p> <p><삭 제></p>
<p>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⑦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u>각호</u>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가</u>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가</u>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p> <p>2. ~ 4. (생략)</p>	<p><u><삭 제></u></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 ----- <u>구청장이</u> ----- ----- ----- <u>구청장이</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p> <p>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 이어야 한다.</p> <p>6.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 ----- -----.</p> <p><u><삭제></u></p> <p>6. (현행과 같음)</p> <p>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p>

현행	개정안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피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② (생략)</p> <p>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p>	<p><u>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부적합</u>-----.</p> <p>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 ----- <u>경우</u>----- ----- ----- ----- <u>각 호</u>-----.</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경우</u>----- ----- -----.</p> <p>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p>

현행	개정안
<p>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울산광역시 건축조례</u>」의 규정에 의하여 <u>울산광역시</u>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p> <p>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2. (생략)</p> <p>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u>기타</u> 관사 등</p> <p>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u>의하여</u>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p> <p>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p>	<p>----- 「<u>울산광역시 건축조례</u>」에 따라 -----</p> <p>-----.</p> <p>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p> <p>----- <u>경우</u>-----</p> <p>-----.</p> <p>② -----</p> <p>----- <u>경우</u>-----</p> <p>-----.</p> <p>제51조(관사의 구분)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그 밖의</u> -----</p> <p>-----</p> <p>제52조(사용허가) -----</p> <p>-----<u>따라</u> -----</p> <p>-----.</p> <p>제53조(사용책임) -----</p> <p>-----</p>

현행	개정안
<p>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u>사유</u>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 <u>각 호</u>-----</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p> <p>----- <u>어느 하나의</u> <u>사유</u>가 있는 경우-----</p> <p>-----.</p>
<p>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u>때</u></p> <p>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u>때</u></p> <p>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u>때</u></p> <p>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u>때</u></p> <p>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u>호</u>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p>	<p>1. -----</p> <p><u>경우</u></p> <p>2. -----</p> <p><u>경우</u></p> <p>3. -----</p> <p>-----</p> <p>----- <u>경우</u></p> <p>4. -----</p> <p>-----</p> <p>----- <u>경우</u></p> <p>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p> <p>-----.</p> <p>----- <u>호</u>의 <u>어느 하나</u>-----</p> <p>-----.</p> <p>1. -----</p>

현행	개정안
<p>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u>시설비</u>(1급·2급 관사에 한한다)</p>	<p>----- 시설비</p>
<p>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2. ----- 한정한다-</p>
<p>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3. ----- 한정한다-</p>
<p>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4. ----- 한정한다-</p>
<p>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5. ----- 한정한다-</p>
<p>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6. ----- 한정한다-</p>
<p>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7. ----- 한정한다-</p>
<p>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u>한한다</u>)</p>	<p>8. ----- 한정한다-</p>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p>

현행	개정안
<p>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관사를 <u>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p> <p>3. (생략)</p> <p>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u>제56조의 규정</u>에 <u>의하여</u>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9조(<u>인계 인수 등</u>)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u> ----</p> <p>3. (현행과 같음)</p> <p>제58조(비품의 관리) ----- ----- ----- <u>제56조에 따라</u> ----- ----- -----.</p> <p>제59조(<u>인계 · 인수 등</u>) ① ----- ----- <u>경우</u>----- ----- -----.</p> <p>② ----- <u>경우</u>----- ----- ----- ----- -----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u>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며, 이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0조(변상조치) ----- ----- ----- ----- 잃어버렸거나 ----- 경우----- -----.</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 ----- ----- <u>규칙에서</u> ----- ----- -----.</p> <p>② ----- ----- <u>규칙에서</u> ----- ----- -----.</p> <p>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 <u>호와 같다.</u></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u>규칙</u>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u>분할납부</u>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다음 <u>각목</u>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p> <p>가.·나. (생략)</p> <p>2. <u>1호</u>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u>규칙</u> <u>에서</u> -----<u>분할</u> <u>납부신청서</u>-----.</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 ----- -----.</p> <p>1. --- <u>각목</u>-----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u>제1호</u>----- ----- ----- ----- ---.</p>
<p>② <u>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u></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u></p> <p>③·④ (생략)</p> <p>제65조(합필의 신청) <u>재산관리관</u>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u>구청장</u>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u>재산관리관</u>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5조(합필의 신청) <u>구청장</u>----- ----- ----- -- <u>경우</u>----- <u>지방자치단체장</u>-----.</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u>구청장</u>----- ----- ----- ----- <u>경우</u>----- ----- -----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p>
<p>제6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p>	<p><삭 제></p>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도법」

-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6조(수익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익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총무과-33026(2018.8.6.)호와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여성청소년과장 이

주무관	류지숙	여성가족계장 박향	여성청소년과	전월 2018. 8. 23.
합조자			장	장준익
시행	여성청소년과-31998	(2018. 8. 23.)	접수	총무과-34499 (2018. 8. 23.)
주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북산동, 중구청)	/ http://www.junggu.ulsan.kr	
전화번호	052-280-4912	팩스번호 052-280-4909	/ ssalnoon@korea.kr	/ 대국민 공개
울산큰애기와 함께 하는 울산중구 여행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32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강영호	전화번호	052-290-31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총무과)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안 제25조, 제26조, 제34조, 제37조, 제63조, 제67조)과 상위 법령 중복규정 정비(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11조, 제37조, 제39조, 제67조),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삭제(제3조제6항),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제39조), 보상금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규정 삭제(제64조제2항)에 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2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중구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p> <p>총무과장 귀하</p>				